

농어업특위 평가 및 향후 운영방향

2005. 7. 14

농어업 ·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목 차

1. 위원회 현황	1
2. 운영실적 평가	3
3. 여건 및 과제	7
4. 향후 운영방향	8
가.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	9
나. 농어업·농어촌정책 점검·평가	10
다. 농어업분야 사회적 통합 구현	12
라. 국민과 함께하는 농어업 실현	13
5. 조직·운영 혁신방안	14
가. 조직혁신	14
나. 업무혁신	15
<제2기 업무추진 로드맵>	16

1. 위원회 현황

설치배경

- '01.11.14 카타르 도하에서 WTO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인 DDA 출범으로 시장개방 확대 전망
- 국민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국민적·범정부적 성격의 대통령자문기구로 출범
 - 당초 '04년까지 한시적인 기구로 설치되었으나, '04.12월 법 개정으로 '07년까지 존속기한이 연장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정('02.1.26), 개정('04.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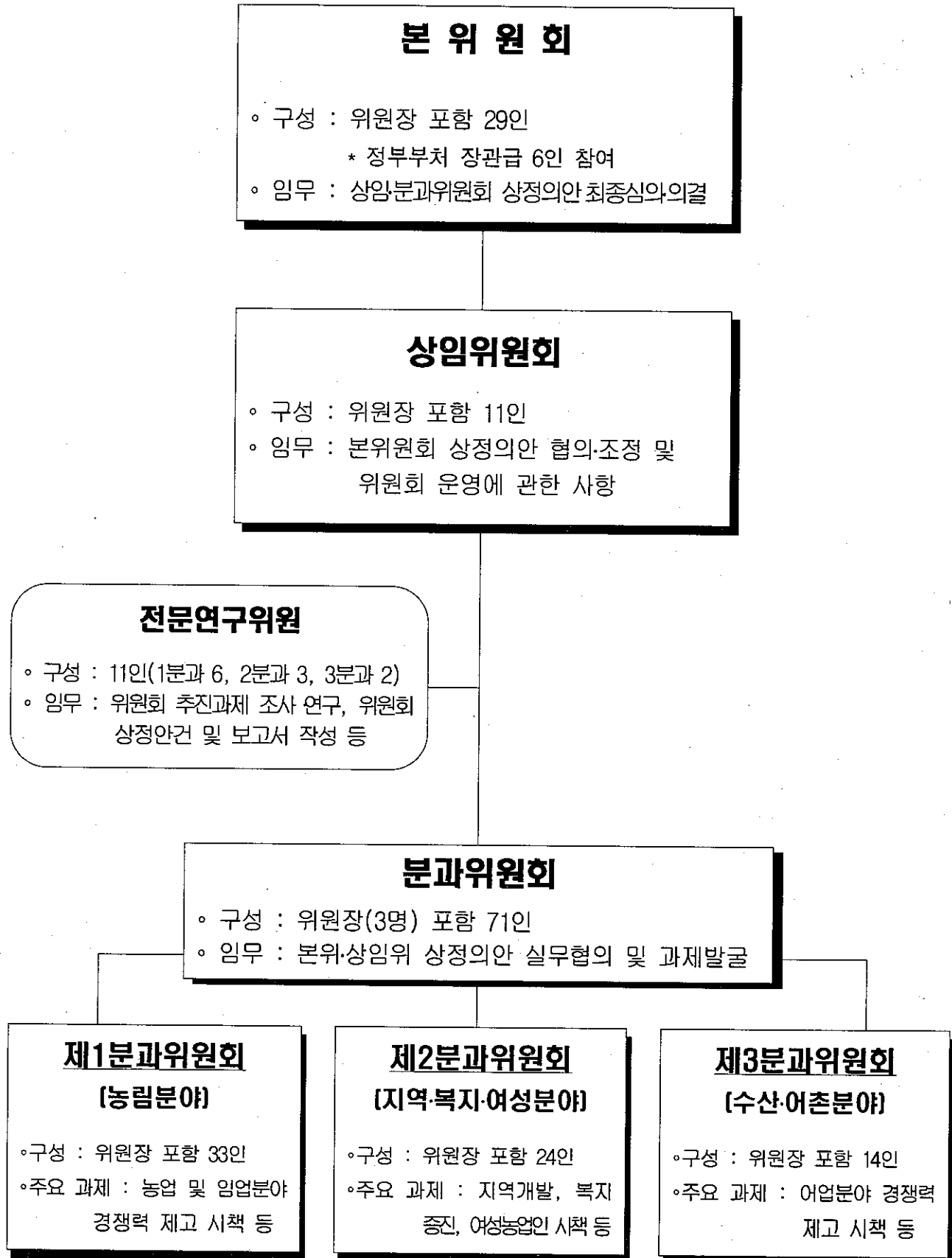
구 성

- 민·관 합동으로 본위원회·상임위원회·분과위원회·지역위원회를 구성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해 관련부처와 기관·단체로부터 파견된 직원으로 사무국을 구성·운영

기능·역할

- 세계무역기구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DDA)의 농어업분야 대응
-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제시
 -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업인의 소득안정
 - 농어촌의 균형발전 및 의료·교육, 그 밖의 농어촌 복지증진 등
- 농어업·농어촌대책 추진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 조정
-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실천계획과 추진상황 점검·평가

<위원회 조직도>



2. 운영실적 평가(2002~2004)

가. 주요 추진실적

◇ 범국민적·범정부적 합의를 바탕으로 중장기 농어업·농어촌 정책방향을 제시, 농어업정책 신뢰강화 및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노력

* '02~'04년간 본위원회 14회, 분과위원회 66회 등 총 420회 회의 개최/
대통령보고 12회(주요현안보고 6, 국정과제보고 6)

2002년 : 농어업·농어촌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정책방향 수립에 역점

- '02. 5~12월간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활로」를 마련
 - 120개 세부과제(농업·농어촌 70, 수산 50)를 선정·협의

2003년 : 농어업·농어촌 종합대책 및 투융자계획 수립

- 관련부처와 협조,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활로」를 토대로 「농업·농촌 종합대책」 및 「수산업·어촌 종합대책」을 수립
- 119조 투융자계획 마련의 토대가 된 「UR 이후 농어촌 투융자 평가와 향후 투융자 방향」을 제시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법」 초안 마련, 관계부처간 합의도출

2004년 : 종합대책 협의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의 합의 도출

- 쌀·DDA 협상협의회,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쌀협상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쌀 관세화유예연장 방향을 제시하여 갈등 최소화
- 논란이 많았던 농지제도 개선방안의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도출
- 농업인단체의 숙원인 식량자급률 목표설정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 제시

<분야별 추진실적>

□ 쌀 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시책개발 및 제도보완

- 쌀 소득보전직불제, 쌀생산조정제, 쌀 재고처리 특별대책 등 마련
-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토대로 쌀 관세화 유예연장 방향 제시
 - 목표가격 설정, 추곡수매제 개편, 식량자급률 목표설정 등 쌀협상에 따른 국내대책 방향에 대한 주요 가이드라인 제시

□ 농지제도 및 영농규모화 사업추진 방식 개선

- 농지소유 상한폐지,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허용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 농지유통화 촉진을 위해 연금지급형 경영이양직불제 도입
- 농지은행기능 도입 등 농지가격 안정 및 영농규모화 촉진을 위한 농지제도 개선

□ 다양한 직접지불제의 확충 및 체계화

- 쌀 목표가격 설정, 고정·변동직불제 도입
- 다양한 직불제를 농가소득 안정, 다원적 기능 제고, 구조조정 보완 등 3개 유형으로 체계화, 직불제 확충 중장기 로드맵 마련

□ 삶의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인프라 확충

- 농어촌 교육·복지·지역개발 관련법 초안마련, 관계부처간 합의 도출
- 농어촌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경관협약제 방안 마련
- 농어촌에 우수한 초등교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방안 마련
-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및 모성보호 등 복지대책 협의

□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및 제도보완

- 연근해어업 경영개선 및 구조조정 방안 마련
- 양식어업 경쟁력강화 및 수산자원 관리조성
- 어촌관광 활성화 대책 마련, 어촌·어항 발전 관련제도 체계화

나. 성과와 반성

<성 과>

- ◆ 개방확대에 대응, 중장기 농어업·농어촌 비전과 정책방향 제시
- ◆ 농어업인단체와 정부간, 정부 부처간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이견조정 및 대안 제시

- DDA 협상타결에 대비한 중장기 정책방향(Road Map) 마련
 - 중장기 정책방향인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활로” 마련
 - 이를 토대로 Road Map에 해당하는 “농업·농촌 종합대책 및 119조 투융자 계획”을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수립
 - 새로운 중장기 수산정책의 기본틀을 제시한 「수산업·어촌 종합대책」 및 12조 4천억원 투융자계획 수립
- 농업인단체와 정부간 등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이견 조정
 - 쌀협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및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한 관세화 유예연장방향 제시
 - 농지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로 합의 도출
 - 식량자급률 법제화 문제 등 농업인단체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방향 제시
- 농림수산정책의 종합적 조정을 위한 범정부적 협의체 역할 수행
 - 삶의질향상법 초안 마련 및 관계부처간 공감대 형성 등
 - 어촌·어항법 제정, 어촌관광 관련 규제 완화 등 부처간 이견 조정
 - 다양한 직접지불제의 체계화 및 중장기 확충방안 마련
- 국제심포지엄,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정책방향에 대한 정보공유 및 개방화에 대응한 농정 개혁방안 모색

<반 성>

- 종합대책 구체화 등 현안해결 위주로 운영, 국정과제위원회의 위상에 맞는 역할 미흡
 - 미래지향적이고 국민적 관심을 대표하는 비중있는 과제 선정 미흡
 - 부처·타위원회와 업무 중복 등 관계 부처간 합의 도출에 한계
 -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진시스템 마련 등
 - 농업·농촌 내부역량 및 자원의 효과적 활용방안 도출 미흡
- 관계부처, 농어업인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 미흡으로 일부현안에 대한 협의·조정역할에 한계 노정
 - 관계부처는 협의 과정을 비효율적 시스템 또는 간섭으로 인식
 - 농어업인단체는 정부대책을 추진·합리화하는 과정으로 오인
- 농어업·농어촌 정책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평가를 통해 현실 여건에 맞게 보완하는 피드백 기능 미흡
 - 그 동안 농수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한 중장기 대책 마련에 치중
 - 앞으로는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평가 병행 필요
-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혁신노력 부족
 -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여론수렴, 정책 홍보 등 부족
 - 전문연구위원, 지역농어업특위 위원, 사무국 직원 등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고, 체계적인 상호협력 미흡

3. 여건 및 과제

<대내적 여건>

- ◇ 농어가 경제의 어려움 증대
- ◇ 국민소득향상, 웰빙 확산 등으로 농수산물 안전성 및 농어촌에 대한 관심 증대



<대외적 여건>

- ◇ DDA/FTA 등으로 인한 농수산물 시장개방 확대
- ◇ 세계 식량수급 불안정성 증대요인 상존



- ◇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산어촌의 활성화
 - 농어업 협상에 대응,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세계 식량 수급 상황 변화에 대비하여 국민 식량의 안정적 확보
 - 농어가 소득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한 대책 강구
- ◇ 농어업·농어촌 종합대책 및 투융자 계획의 효율적 추진
 - 농업분야 119조원 및 수산분야 12.4조원 투융자계획 평가와 보완으로 정책의 효율화 도모
 - 식품안전, 환경에 대한 소비자 관심(Well-being) 증가 등 농어업 생산·유통여건 변화에 부응한 정책혁신 필요
- ◇ 농어업 관련 주체들간의 참여와 협력 강화
 - 신뢰·책임 농어정으로 농어업·농어촌의 희망찾기 추진
 - 농어업인단체에 대해 권한과 함께 사회적 책임의식 공유 요청 증대

4. 향후 운영방향

비 전

◇ 농어촌과 도시가 더불어 발전하는 동반성장 구현



목 표

- ◇ 선진 농어업 육성과 농어가 소득안정
- ◇ 미래형 농산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 ◇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으로 국민경제 발전



추진 전략

- ◇ 국정과제위원회 등과 범정부적 협조 체제 유지
- ◇ 지역농어업특위 등 지방 농어정 주체와 연계 강화
- ◇ 농어업인 정책수요자와 함께하는 협치농정 활성화



중점 과제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	농어업·농어촌 정책 점검·평가
○농업·농촌기본법 개정방향 설정 ○식량자급률 목표 설정 ○DDA/FTA 협상대응 등	○종합대책·투융자 계획 점검·평가 -시스템 경쟁력 강화에 중점 ○농업분야 5대 국정과제 점검
농어업분야 사회적 통합 구현	국민과 함께하는 농어촌 실현
○관계부처간 현안에 대한 이견 조정 -학교급식, 식품산업 육성 등 ○취약분야 지원대책 마련 -농어촌 교육·복지·의료 등	○농어업인의 자구노력 강화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농어업·농어촌의 희망찾기 등

가.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

◇ 참여정부의 국정 철학을 바탕으로 농어업·농어촌의 미래와 희망을 제시

○ DDA/FTA 등 개방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불안감 해소

□ '99년 법 제정이후 변화된 여건에 맞게 농업·농촌기본법 개정 방향 설정

○ 농업·농업인·농촌 등 기본개념, 지방농정 활성화, 농업경영체 활성화, 통일대비 농정방향 등을 중점 검토하여 개정방향 설정

○ 도시민의 농촌 회귀 및 노후생활정착, 농산어촌 복합산업화전략 등 도농균형발전 시책 반영

□ 개방 확대에 대응, 식량자급률 목표 설정 및 합리적 대안제시

○ '04년 농업인단체·전문가 등과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농업·농촌 기본법에 따라 식량자급률 목표를 합리적 수준으로 설정하고 정책대안 제시

□ DDA 협상/FTA 체결 동향 점검과 보완대책 마련

○ 국가별·품목별 영향분석 및 협상전략 마련, 보완대책 제시 및 투융자 계획 보완

○ 협상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통일대비 남북 농어업 협력기반 강화

○ 남북 농어업협력의 목표와 기본원칙 제시

○ 정부·민간단체·기업의 역할 분담 및 종합적인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기본 방향 설정 등

나. 농어업·농어촌 정책 점검·평가

◇ 농어업인 등 정책수요자 중심의 점검·평가 실시

- 투융자의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혁신에 중점을 두어 농정불신 해소 및 정책 경쟁력 제고

□ 농어업인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평가대상 과제 선정, 정책수요자 중심의 점검·평가 실시

○ 시스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

- 농어업인 교육정책 혁신, 농어업 예산·금융 지원체계 혁신, 협동조합 역할 강화, 농어정 추진체계 혁신, 농산어촌 활성화 등

○ 참여정부 농업분야 5대 국정과제

- 농업인력 정예화, 농지제도 개선, 쌀산업대책, 직접지불제 확충, 농촌사회안전망 및 기초복지인프라 구축

□ 평가의 전문성·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민·관합동으로 「농어업 정책점검·평가협의회」 구성·운영

○ 농어업인단체, 전문가, 관련부처 등 15인 내외로 구성하고,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해 과제별 T/F팀 구성·운영

- 필요시 과제별로 외부 전문가에게 연구를 의뢰하고, 연구담당자가 T/F팀에 참여

○ 공개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 내용 보완 및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 확보

□ 점검·평가결과에 기초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정책에 반영

○ 평가과제를 년도별로 배분하여 과제별 추진상황을 평가, 평가실시 다음연도 2월말까지 개선방안 제시(예산편성 일정 감안)

○ 국정과제는 매년 추진상황을 평가, 평가실시 다음연도 2월말까지 개선방안 등 결과제시

중점 평가 과제

① 농어업인 교육정책 혁신

- 농어업 인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체계 혁신방안 마련
- 전문지식과 경영마인드를 갖춘 젊고 유능한 농어촌 인재 육성

② 농어업 예산 및 금융 지원체계 혁신

- 농어업인의 정책 참여 활성화로 투융자계획의 실효성 확보
- 농어업인의 자력성장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효율화 방안 강구
- 신용보증 확대 등 수익자 위주의 선진농업금융 제도로 개선

③ 협동조합 역할 강화

- 농어업인 조합원 중심, 일선 조합중심의 협동조합 발전 방안 마련
- 개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조직의 규모화, 사업의 전문화 방안 제시
- 협동조합이 지역농정의 주체로 역할할 수 있도록 조직 혁신

④ 농어정 추진체계 혁신

- 농어촌의 시각에서 문제인식, 자원배분, 피드백하는 추진체계 확립
- 계획·집행·평가의 전과정에 현장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참여 확대
- 농어업·농어촌 정책의 추진조직 혁신 및 지도자 양성체계 구축

⑤ 농산어촌 활성화

- 도시민의 농어촌 체재·정주 지원을 위한 토탈서비스 시스템 구축
- 기초생활환경 정비 및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에 적합한 생활공간 조성

다. 농어업분야 사회적통합 구현

- ◇ 사회적 합의와 지지획득이 필요한 과제에 대하여 이해계층·집단간 사전 합의도출로 동반성장 실현
- 농어업분야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대상과제

- 매년 농림부·해수부 등 관계부처, 농어업인·시민단체로부터 필요한 과제를 신청·접수
 - 관계부처간 이견 조정 및 대안 마련
 - 학교 급식체계 내실화, 식품산업 육성 등
 - 취약분야 및 이해계층의 관심사항에 대한 대안 마련
 - 농어촌 교육·복지·의료 등 「삶의질법」의 구체화·효율화, 농어촌 일자리 창출, 농수산물 수급조절 및 자조금 등
- 갈등조정이 필요한 과제를 수시로 발굴하여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

□ 추진절차

- 과제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위원 2~3명 선정
- 전문위원 중심으로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 청취
- 갈등 조정방안 마련 후, 이해관계 당사자와 공동 협의
- 독자적 조정이 어려운 경우는 국정과제조정회의에 상정하여 협의·조정

□ 농어업분야 상호협력체계 구축

- 갈등조정과제 추진과 병행, 농어업인단체·정부간 신뢰회복 및 협력체계 구축
- 농어업인단체·관계부처와 「업무협의회」를 신설하여 수시로 현안문제 사전 조율

라. 국민과 함께하는 농어업 실현

◇ 농·소·정간의 참여와 협조과정을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협치농정 구현

- 국민과 함께 선진농어촌 건설을 위한 농어업인·단체의 자구 노력 강화로 책임과 권리의식 공유
 - 개방화, 민주화, 지방화 시대에 맞춰 농어업인 조직의 역량 강화 및 농·소·정 연계강화
 - 농수산물, 농어촌 어메니티 등의 자원을 소비자들에게 최상의 상태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쾌적한 정주·휴양공간 조성을 위하여 농어업인이 주도하고,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농산어촌 Clean운동」 전개 등
-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
 -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 개발 및 적절한 보상방안 마련
 - 다원적 기능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 민·전·관이 참여하는 「농산어촌 홍보전략 포럼」 설치
 - 초·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농어촌체험 학습 포함 유도
- 국민과 함께 농어업인과 함께, 농어업·농어촌의 미래와 희망찾기 운동 전개
 - 「농어업·농어촌 뉴비전 선언」 제정 등 청사진 제시로 새로운 희망을 제공
 - 농어업분야 성공사례 발굴·확산으로 농어촌에 대해 국민들이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유도
- 우리 농어업·농식품의 세계화로 외연을 확충
 - 우리 식문화의 해외 홍보, 해외농업개발 지원 시스템 확립, 세계 한민족 농업인 Network 구축 등

5. 조직·운영혁신 방안

가. 조직혁신

□ 위원회 운영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 본위원들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과제추진
- 상임위원회는 관계부처간 협의·조정, 운영 협의 등에 역점
- 분과위원회 정례화·활성화 및 주요과제에 대한 소위원회 구성·운영
- 전문연구위원의 「연구계약제」 도입으로 정책개발 역량 강화
- 사무국 업무혁신으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상근직원으로 사무국장을 보임하고, 농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비상근 사무부국장 위촉
 - 매월 2회 외래강사 초청 또는 현장방문을 통한 혁신세미나 개최

□ 지역농어정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농어업특위 활성화

- 지역·중앙 농어업특위간 정례간담회 개최, 현장의견 수렴
- 지역농어업특위가 주도적으로 지역 농어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지역농어업 정책에 대한 자문기능 강화, 지역농어정 활성화 방안 마련
 - 지역농어업특위에 농어촌 문제 연구 및 활동비 예산지원 추진

□ 국정과제위원회와 유기적 협조 강화

- 타 위원회와 역할 분담, 상호협조 등을 통해 공동 추진하는 방안 강구
예) 지역균형개발, 농어촌 교육·의료·여성·노인·복지·환경 등

나. 업무혁신

□ 과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내실 있게 추진

- 많은 논의과제와 잦은 회의로 인한 행정낭비 요인 최소화
- 과제선정시 관계부처·농어업인단체 등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합의 하에 선정하여 참여 활성화 및 과제논의 효과 극대화
- 주요 과제별로 프로세스와 노하우를 정형화하는 표준 메뉴얼 작성

□ 현장 밀착형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한 여론수렴기능 확충

- 농어업인단체·부처와 「업무협의회」 구성·운영, 갈등소지 사전예방
- 농어정 현장방문 의견 수렴 및 정책 설문조사 정기실시
- 농어업계 원로를 중심으로 「정책자문단」 구성·운영

□ 농어업·농어촌 정책에 대한 홍보기능 대폭 강화

- 정책고객관리시스템(PCRM) 구축
 - 주요 논의과제에 대한 체계적 의견수렴과 평가기능을 강화하여 전문가나 일반인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최대한 활용
- 관련 전문가들로 홍보 대책팀 구성·운영
- 농어업특위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 자료집 발간·배포
- 국정철학, 농어업정책, 농어업특위 활동사항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전면 개편

□ 업무여건에 따라 T/F팀을 탄력적으로 구성·운영

-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회」 구성·운영

제2기 업무추진 로드맵

	1단계(2005)	2단계(2006)	3단계(2007)
①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	○농업·농촌기본법 개정방향 설정 ○식량자급율 목표설정 및 합리적 대안제시	○DDA/FTA 등 동향 점검, 보완대책 마련	○남북 농어업 협력 기반 강화
② 농어업·농어촌 정책 점검·평가 및 대안 제시	○농어업 교육정책 혁신 농어업 예산·금융 지원체계 혁신 ○농업분야 5대 국정 과제 점검·평가	○협동조합 역할 강화, 농산어촌 활성화 ○농업분야 5대 국정 과제 점검·평가	○농어정 추진체계 혁신 ○농업분야 5대 국정 과제 점검·평가
③ 농어업분야 사회적통합 구현	○여성농업인 육성 ○학교급식 체계 내실화 * 통합과제 수시 발굴, 사회적 갈등 조정	○농어촌 노령화 대책 ○농어촌 일자리 창출 * 통합과제 수시 발굴, 사회적 갈등 조정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 통합과제 수시 발굴, 사회적 갈등 조정
④ 국민과 함께하는 농어업 실현	○농어업인 조직의 역량 강화 ○농·소·정 연계 강화	○소비자 조직의 활성화 ○농어업·농식품의 세계화	○농어업·농어촌의 미래와 희망 제시

[참 고]

중점과제

[1]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

- 농업·농촌기본법 개정방향 설정
- 식량자급율 목표설정 및 합리적 대안제시
- DDA협상/FTA체결 동향 점검과 보완대책 마련
- 통일대비 남북 농어업 협력기반 강화

[2] 농어업·농어촌 정책 점검·평가

- 농어업인 교육정책 혁신, 농어업 예산·금융 지원체계 혁신, 협동조합 역할 강화, 농어정 추진체계 혁신, 농산어촌 활성화 등
- 참여정부 농업분야 5대 국정과제

[3] 농어업분야 사회적 통합 구현

- 관계부처간 이견 조정 및 대안 마련
 - 학교급식체계 내실화, 식품산업 육성 등
- 취약분야 및 이해계층의 관심사항에 대한 대안 마련
 - 농어촌 교육·복지·의료 등 「삶의질법」의 구체화·효율화, 농어촌 일자리 창출, 농수산물 수급조절 및 자조금 등

[4] 국민과 함께하는 농어업 실현

- 농어업인·단체의 자구노력 강화
- 농어업·농어촌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
- 농어업·농어촌의 미래와 희망갖기 운동 전개
- 우리 농어업·농식품의 세계화

농 · 도 상생을 위한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

2005. 7. 14

농어업 ·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목 차

1. 추진배경	1
가. 추진여건	2
나. 필요성	4
다. 추진경과 및 보고범위	5
2. 사례 분석 및 시사점	8
가. 도시민의 농어촌 체재·정주의향 조사	8
나. 도시민의 농어촌 체재·정주 사례	9
다. 지방자치단체의 도시민 유치 지원정책 사례	16
라. 정책적 시사점	19
3. 도시민의 농어촌 체재·정주 지원방안	20
가. 농어촌 정주희망 도시민에 대한 토탈서비스 제공	21
나. 도시민의 농어촌 체재·정주지원 강화	25
다. 도시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정주공간 조성	32
라. 농어촌 공간조성사업 추진체계 정비	36
4. 향후 추진계획	40
가. 추진방향	40
나. 부처별 세부추진과제	41
다. 추진일정(로드맵)	43

<참고>

1.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관련 주요지표	44
2. 도시민의 농어촌 체재·정주 유형별 사례	45

1. 추진배경

◇ 산업화·개방화의 진전에 따라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열악한 생활환경 등으로 농어촌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

○ 총 인구중 농어가인구 비중은 '90년 16.7%에서 '04년 7.5% 수준으로 감소

⇒ 농어촌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도시민을 농어촌으로 유입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추진 필요(삶의질향상 계획의 농어촌 인구비중 목표 20% 수준)

◇ 최근 농어촌의 역할이 농업생산에서 생활·경제활동 공간, 환경 및 경관 공간으로 확대되면서 농어촌의 중요성 증대

○ 소득향상, 주 5일 근무, 교통여건 개선 등으로 여가생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농어촌관광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

- 웰빙(Well-being)생활의 중시로 농어촌에 대한 관심 증대

○ 도시은퇴자들의 노후생활공간으로서 농어촌의 역할이 증대

⇒ 농어촌에 체재하거나 정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을 정책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

◇ 농어촌 지역을 활성화 시키고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해 도시민이 여가생활 및 휴양을 위해 농어촌을 찾아오고 농어촌에 와서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

가. 추진여건

□ 농어촌 인구의 지속적 감소에 따른 공동화현상 심화

- 농어촌(읍·면) 인구비중이 '90년 25.9%에서 '00년에 20%로 감소하였으며, 별도의 대책이 없을 경우 '13년에는 17.2%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인구 3천명 이하인 면도 '90년 152개에서 '00년 447개로 크게 증가하여 농어촌의 공동화현상 심화
 - 지역별로는 전형적인 농어촌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강원·충북·경북·전북·전남은 타지역 전출초과 등으로 급격한 인구 감소 추세인 반면, 대도시 주변 등 일부 농어촌은 인구가 증가
- 총 인구중 농어가인구 비중은 '90년 16.7%에서 '04년 7.5% 수준으로 감소

□ 국민소득 향상으로 도시민의 농어촌에 대한 관심 증대

- 소비자들의 생활패턴 다양화에 따라 도·농교류, 나아가 농어촌 정주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예상
 - 생태적·환경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웰빙(Well-being) 중시 추세
 - 전원생활 선호 및 고품질의 안전농산물과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와 연계된 농어촌 체재 및 체류 증가 예상
 - 동적 여가활동의 증대, 가족단위 여행의 보편화, 증가된 여가시간을 주말에 적극 활용하는 체류형 여행 인구의 증가
 - 계획적인 여가활동 및 저렴한 문화·건강 활동 선호 전망

○ 농어촌관광의 수요가 일반관광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 전망

- 주 40시간 근무제, 주 5일 수업제 시범추진 등으로 전체관광수요는
지속적 증가 예상

- 국내관광총량은 '14년까지 매년 약 4.2%씩 증가 예상

* 국내관광총량 : ('04) 3.7억명 → ('09) 4.5억명 → ('14) 5.6억명

- 외국의 예를 볼 때, 농어촌 관광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불 이상
되면 활성화

○ 도시의 과밀화, 복잡한 생활조건 등으로 도시민들의 전원생활에
대한 욕구 증가

□ 인구의 노령화 추세 가속화

○ 총인구는 '20년까지 증가가 예상되지만, 출산 감소,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유년인구가 감소하면서 급속한 인구의 노령화 전망

- 65세이상 노령인구는 '05년 9.1%에서 '18년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6년에는 20.8%로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지방 5대 도시의 노령인구는 급속히 증가
하고 타지역은 소폭 증가 예상

* 수도권, 지방 5대도시 노령인구 : ('05) 2,438천명 → ('10) 3,139천명 → ('15) 4,006천명

○ 은퇴자 등 노령인구가 쾌적하게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공간
으로서 농어촌의 기능이 새롭게 부각

나. 필요성

□ 장래 농어촌인구의 구성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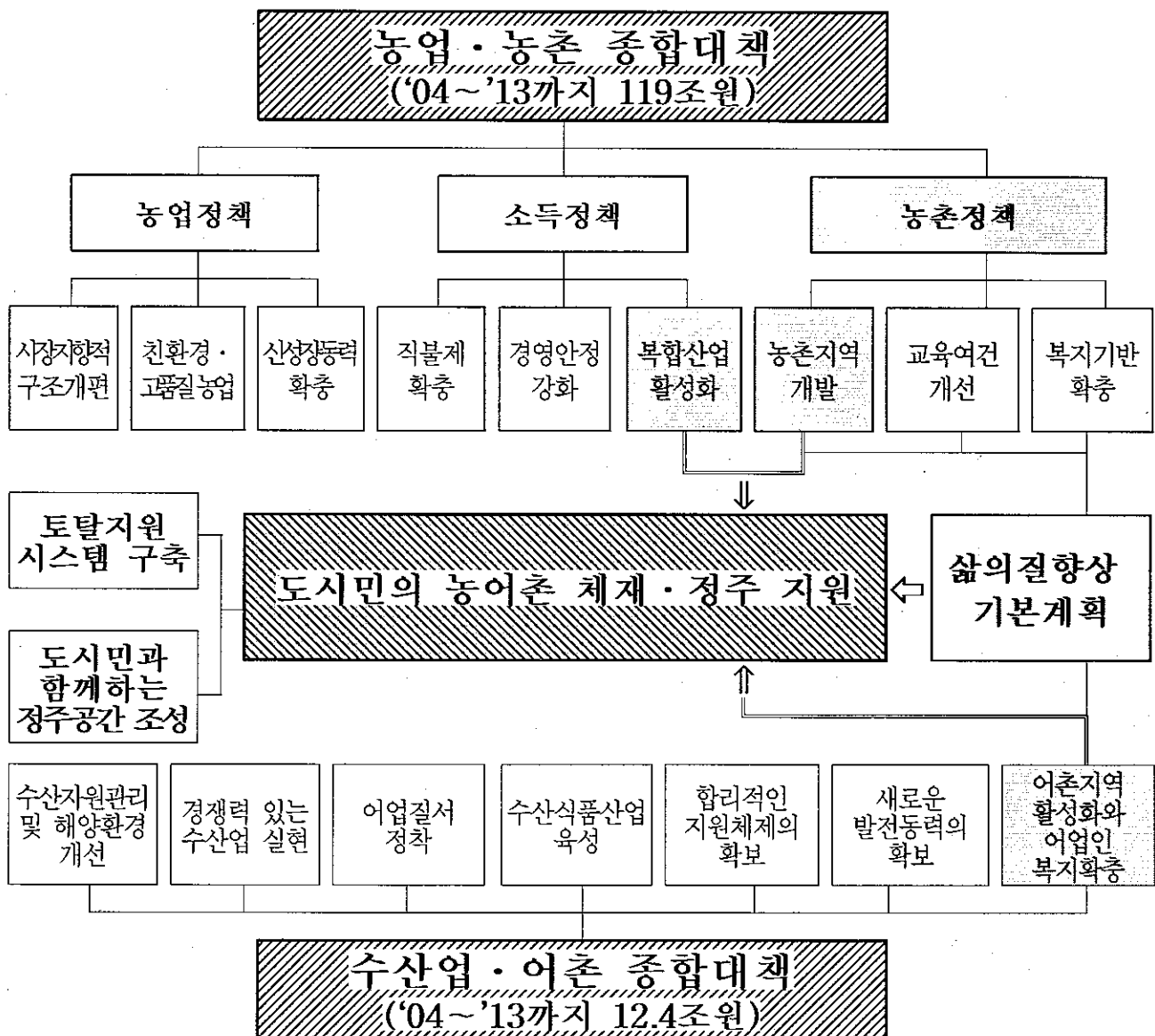
- 농어가 인구가 4%, 농어촌 인구가 20% 수준이라면, 농어촌 인구중 80% 수준은 비농어가 인구가 차지
- 농어촌취업자 가운데 농어업취업자의 비중도 감소 전망
 - 선진국의 경우 농어촌취업자 가운데 농어업취업자의 비중은 10% 미만
 - 농어업 취업자 유지도 필요하나 비농업부문의 취업기회 확대가 농어촌 지역 활성화의 관건
- 생태·휴양·역사·문화·체험 등 농어촌의 새로운 기능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기능에 맞는 일자리 창출 필요
 - 농어촌 어메니티 자원의 발굴·회복과 보전·유지관리에 필요한 인재의 양성 및 공급
 - 농어촌지역의 개발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시행할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공급
 - 농어촌의 새로운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취업자의 증가
 - 농수산물 가공·유통의 활성화를 통한 부가가치 증대(별도 추진)

□ 농어촌기능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효과

- 도시 청년층 등을 농어촌기능의 활성화에 필요한 인적자원으로 활용
- 도농교류 활성화에 따른 도시민의 농어촌 왕래로 농어촌지역에 새로운 소득원 창출
- 도시민의 농어촌정주 확대는 농어촌지역의 활성화 및 인구 유지에 직접적으로 기여

다. 추진경과 및 보고범위

- ◇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을 위한 「농어업·농어촌 종합대책」 마련('04.2)
 - 「농어업·농어촌 종합대책」 중 살고싶은 농어촌 조성을 위한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05.4)
- ◇ 본 내용은 삶의질 향상 기본계획 중 도시민이 농어촌을 찾고 정주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에 중점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기본계획

① 기본계획의 비전

- 삶과 휴양, 산업이 조화된 복합 생활공간으로서의 농산어촌 구현
- 중소도시 수준의 생활인프라를 구축하여 농촌인구를 현재수준인 20%로 유지

② 주요내용 : 4대분야 14개 과제

□ 농어촌 복지기반 확충

- 사회안전망 강화 : 건강보험 경감율 확대, 연금보험료 지원 및 농작업 안전공제 보상강화 등
- 보건·의료기반 확충 : 보건소 등 의료시설·장비보강, 농작업 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확대, 마을 건강관리실 운영 내실화 등
- 영유아 및 여성복지 지원 강화 : 농어촌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영유아 양육비 지원 및 농어가 도우미 지원 확대
- 노후생활 지원 : 거동불편 노인 등을 위한 노인보호 지원체계 구축, 재가노인복지센터 확대, 고령친화 농업모형 보급 등

□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 교육기회 확대 : 농어촌 학생 대입특별전형 확대, 소규모 학교 운영 활성화, 공립유치원 증설 및 유아교육비 지원확대 등
- 교육비 부담 경감 : 고교생 학자금 지원대상을 전농가로 확대 ('04까지는 1.5ha 미만 농가만 지원), 급식비 지원 확대 등
- 교원 근무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 : 오지학교 사택 확충 및 현대화, 교육감 추천 교대입학제 확대(4개도→7개도), 학교시설·교구 지원 등

□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

- 인적자원 개발 : 지역개발 리더 양성, 전문가 풀 및 네트워크 구축 등
- 민간참여 촉진 : 공공시설에 대한 민자참여(BTL) 활용, 추진 방식 다양화 등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개발추진 : 관계부처 지역개발협의회 구성·운영, 주거·상하수도·도로 등 기초 생활환경 개선 등

□ 복합산업 활성화

- 향토산업 진흥 : 향토자원 DB 구축, 특구지정·운영, 농공단지 등 지역특화단지 육성, 전통음식·식문화의 세계화 등
- 농촌체험·휴양 활성화 : 농어촌 체험마을 육성, 박람회 등 도시민 수요 창출, 향토 문화관광 축제 활성화 등
- 농어촌의 경관보전 및 어메니티 자원화 : 경관보전 직불제 도입, 지역별 고유경관 조성 및 우수경관 지역발굴·홍보 등
- 도농교류 활성화 : 1사1촌운동 확대 및 내실화, 도시민 농어촌주택 갯기운동 추진, 도농교류 참여 프로그램 확대, 도농교류촉진법제정 등

③ 투융자 계획('05~'09) : 총 투융자 규모는 20조 2,731억원

- 국비 11조 5,527억원(57%), 지방비 8조 1,659억원(40%), 자부담 5,545억원(3%)

* 국비중 7조 6,862억원(67%)은 119조 투융자 재원, 나머지 3조 8,66억원(33%)은 각 부처 중기재정 재원임

- 분야별 : 복지 16.9%, 교육 15.5%, 지역개발 55.5%, 복합산업 12.1%
- 매년 재정여건, 사업의 타당성, 추진실적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투융자 계획을 조정

2. 사례 분석 및 시사점

- ◇ 도시민이 농어촌을 찾는 유형을 i) 5都2村(농어촌 체제), ii) 5村2都(농어촌 정주)로 구분
- ◇ 도시민의 농어촌 체제·정주의향 조사, 실제사례 및 지방자치 단체의 도시민 유치사례 등을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 도출

가. 도시민의 농어촌 체제·정주의향 조사

- 지난 2년간('02~'03) 농어촌관광을 경험한 도시민은 10.6%, 향후 1년내 농어촌관광예정자는 17.3%로 조사
 - 농어촌관광에 대한 정보는 주로 주변사람(42.5%)과 인터넷 검색(33.0%)을 통해 입수
 - 농어촌 관광시 불편한 점은 화장실, 샤워시설, 방의 청결상태 등으로 조사
 - 관광지역으로는 자연환경 보전지역(44.3%), 교통편리지역(24.1%)을 선호
- 40대 이상 도시주민의 58.0%가 은퇴후 농어촌정주 희망
 - 희망하는 농어촌 주거형태로는 주로 마을내 단독주택(36.7%)과 전원주택단지(29.4%)로 조사
 - 주택마련 방법은 다수가 개별 구입(78.0%), 분양(13.9%)을 희망
 - 농어촌 정주시 불편 사항은 i)의료, ii)대중교통, iii)편의시설, iv)소득, v)안전, vi)친구왕래, vii)문화시설 등의 순으로 조사
 - 농어촌생활에서 필요한 것으로는 의료시설, 연금제도 확충, 노인복지 시설, 여가·문화시설, 노인복지·노인일자리 등의 순으로 조사

나. 도시민의 농어촌 체재 · 정주 사례

(1) 농어촌인구 증가 조사

□ 전국 농어촌지역 140개 시·군 중 최근 2년간('02~'04) 인구가 늘어난 시·군은 32개 (22.9%)

○ 증가사유는 도시확산(16), 산업단지 입주(7), 근교전원(4), 관광·농업수입(3) 등으로 조사

* 수도권·광역시 제외시 120개 시·군중 18개 시·군(15%)의 인구 증가

□ 전국 농어촌 지역 1,420개 읍·면중 인구가 늘어난 읍·면은 203개 (14.3%)

○ 증가원인은 도시확산(68), 산업단지(33), 도시근교 전원생활(22), 관광·농업수입(16), 학교 등 기타(57) 등임

□ 전국 36,009개 농어촌 마을(읍·면의 행정리)중 2,506개 마을(7.0%)에서 인구가 증가

○ 증가 사유는 주택단지 조성, 산업단지 입주, 자연증가, 전원생활 등으로 다양

* 전원생활 436개, 농업종사 275, 산업단지 입주 162, 주택단지 378, 자연증가 812, 학교 26, 사회복지시설 16, 기타 401

□ 인구증가와 별도로 농어촌 체험관광 등 도·농교류에 참여하는 마을도 점차 증가

* 농어촌 체험마을 : ('02) 35개 → ('05) 238

* 1사1촌운동 참여마을 : ('04) 2,473개 → ('05.6월말) 5,536(농촌 5,414, 어촌 122)

(2) 농어촌마을 유형별 사례

□ 조사결과를 토대로 도시민 농어촌 체재·정주유형을 6가지로 구분

《5都2村(농어촌 체재)》

- ① 농어촌체험관광형 : 도시에 거주하면서 주말에 농어촌지역을 방문하여 농사, 전통문화 등을 체험
- ② 주말전원생활형(Second House) : 도시에 거주하면서 농어촌 지역에 별도의 전원주택을 보유하고, 별장으로 이용하거나 주말농장으로 운영

《5村2都(농어촌 정주)》

- ③ 취업형 : 도시에 거주하다가 농어업 또는 2·3차 산업에 종사할 목적으로 농어촌으로 이주
- ④ 노후생활형 : 직장 은퇴후 노후생활을 농어촌에서 전원생활을 하면서 지낼 목적으로 농어촌에 이주
- ⑤ 도시출퇴근형 : 생계수단은 도시에 있으나, 낮은 집값, 전원생활 향유 등 목적으로 농어촌에 정주하면서 도시로 출퇴근
- ⑥ 기타형 : 각급학교·대안학교 취학, 휴양·치료 등을 목적으로 농어촌으로 이주

1] 농어촌체험관광형

□ 농촌 : 경북 의성군 안계면 교촌리 교촌마을

- 농촌체험관광사업으로 '04년에는 3,400명 방문, 270백만원 매출
* 방문객 : ('03) 1,700 → ('04) 3,400명, 매출액 : ('03) 159 → ('04)270백만원
- '02년 마을공동숙박시설 설치, 폐교 구입 등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추진
- 전담사무장을 고용하여 농사·자연·농촌문화체험, 기획캠프 등 100여개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
- 마을부녀회 중심으로 여성일감맞기 사업장 및 팜스테이(11가구) 운영

□ 어촌 : 강원 삼척시 근덕면 장호1리

- 어촌체험관광사업으로 '04년에는 7,000명 방문, 381백만원 매출
* 방문객 : ('03) 3,000 → ('04) 7,000명, 매출액 : ('03) 48 → ('04)381백만원
- '03년 생태 및 선상 체험장 등 어촌체험마을사업 실시

2] 주말전원생활형 : 전북 임실군 운암면 운정리·운종리

- 가구/인구변화 : ('02) 92호/213명 → ('04) 108/227 → ('05) 105/227
- 옥정호 주변의 경관이 수려하고 인근 전주와 접근이 용이하여 도시민 관심 증대
- 최근 마을 진입로 확포장 등으로 민간자본에 의한 전원주택 신축 확대
- '01년 7세대, '02년 2세대 등 9세대 주말전원주택 조성

3] 취업형

□ 농업취업 : 충남 금산군 제원면 바리실 마을

- 가구/인구변화 : ('02) 67호/198명 → ('04) 72/217 → ('05) 78/212
- 경관이 좋은 산촌마을로서 대전과 가까운 유리한 입지 여건과 타마을에 비해 고소득 실현(주소득작목 : 사과)
- '04년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 '산벚꽃축제' 매년 4월경 개최(관광객 2만명 유치)

□ 어업취업 : 전남 완도군 노화읍 미라리 마을

- 가구/인구변화 : ('02) 104호/301명 → ('04) 108/300 → ('05) 117/317
- '00년부터 김양식에서 수익성이 높은 전복양식으로 어장의 대체개발이 성공함에 따라 대도시 거주자의 전복 양식업 종사목적의 이주 증가
 - 미라리 마을 호당 연평균 소득 약 60백만원
 - '02 ~ '05년간 12가구 46명 이주

□ 산업단지 입주 : 충북 진천군 만승면 광혜원리

- 가구/인구변화 : ('02) 2,272호/6,548명 → ('04) 2,730/7,245 → ('05) 2,786/7,307
- 광혜원 산업단지, 농공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인구 증가
- 수도권 산업체 규제, 비수도권 이전에 따른 세제혜택, 중부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 접근 용이 등으로 진천지역 산업단지 이주 촉진

□ 농촌관광 등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3리 황태마을

- 가구/인구변화 : ('02) 153호/404명 → ('04) 185/491 → ('05) 203/504
- 농촌관광 관련 취업과 귀어의 복합적 요인에 의해 인구 증가
 - 내설악 국립공원, 동해안 등 관광명소가 인접, 펜션과 랏지 임대업 목적의 도시민 이주
 - 전국제일의 황태생산지로, 영농(어)조합법인 등에 취업목적의 귀어 증가
- 미시령 동·서 관통도로의 거점지역으로 마을 접근성 용이

[4] 노후생활형

□ 충남 홍성군 홍원리(은퇴농장)

- 가구/인구변화 : ('03) 167호/534명 → ('04) 166/488 → ('05) 173/500
- '90년대초 지인 대상으로 먹거리사업(작거래)을 하던 개인이 '96년부터 은퇴농장 운영
 - 신문·방송, 인터넷홈페이지, 지인소개 등으로 17가구 18명(연령 60~80대) 입주
 - 1만평의 농지에 농장이 딸린 주택 24호 신축 임대
- 유기농 채소 공동재배로 건강한 생활영위 및 1인당 월 50만원 수입
 - 수입은 관리비(33만원/월) 등에 사용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독일마을」

- 가구/인구변화 : ('02) 5호/10명 → ('05) 8호/16명
-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로 나가 일하던 교포들이 '97. 11월 정착마을 희망
- '00. 6월 「독일마을」 건설 계획, '01. 7월 공사에 착공, '02. 3월 독일 주택 5동을 시작으로 현재 16동 건축완료, 9동 건축중
 - 지자체에서 부지, 도로, 상·하수도 등 SOC 지원
- 독일마을 내에 전통문화예술촌을 건립할 예정, 향후 관광객 증가 예상

[5] 도시출퇴근형

□ 전남 담양군 용면 쌍태리

- 가구/인구 변화 : ('02) 70호/213명 → ('04) 78호/220명 → ('05) 79호/223명
- 대학교수가 전원생활을 위해 전문직 종사 친구들과 함께 이주
 - 광주와 인접, 도시직장 출퇴근이 용이하고, 자연경관이 좋은 입지 여건
- 담양군은 광주와의 근접성을 활용, 도시민 유치를 위한 생태 도시·전원도시 개발 계획

□ 경남 하동군 진교면 고통리 평당마을

- 가구/인구변화 : ('01) 87호/270명 → ('02) 322/977 → ('04) 399/1,218
- 경관이 좋고 인근 광양제철, 하동화력발전소 등으로 출퇴근이 가능하여 인구가 계속 증가
- 인구가 늘어나면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초등학교의 학생수 증가

6 기타형

□ 대안학교 : 경남 산청군 신안면 외송리 안솔기마을(간디학교)

- 가구/인구변화 : ('98) 6호/12명 → ('02) 14/42 → ('04) 30/92 → ('05) 35/107
- '99년 「간디학교(고등학교)」 교육부 최초 대안학교 인가
 - 최초 학생 20명에서 '05년 100명으로 증가
 - 기존 폐가옥 5동을 구입·수리하여 교사가족 14세대 44명 이주
 - 자녀교육 뒷바라지, 도시직장출퇴근, 귀농 등을 위해 도시주민 15세대 53명 이주
- 향후 인근 폐교부지를 활용, 중학교 건립

□ 문화시설 : 경기도 화성시 수화동(중전 문충마을)

- 가구/인구변화 : ('02) 122호/322명 → ('04) 124/306 → ('05.6) 132/322
- '01년 폐교 활용, 종합예술활동공간인 「창문아트센터」 개소 (폐교활용 우수사례)
 - 예술가(10명) 작업실, 자연미술학교 운영 및 계절별 예술제 개최
- 도시출신 예술가와 마을 주민이 함께 다양한 농촌체험사업 실시
 - 학원·유치원·어린이집과 자매결연 및 체험활동, 주말농장 등 운영

(3) 현장애로 및 건의사항

☐ 인프라 측면

- 교통, 교육, 의료, 정보화기반 등 기초생활여건 개선
- 젊은이들의 농어촌 유입을 위한 문화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등 복지기반 확충

☐ 제도개선 측면

- 폐교를 마을 공동시설로 활용할 경우, 장기임대 계약, 임대료 면제 및 최소비용 매각
- 산책로 등 편의시설 건설이 가능하도록 국유림 사용 허가
- 준비단계부터 정착시까지 필요한 종합정보지원 시스템 구축
- 농지전용, 농사용 창고 건립 등 행정절차의 간소화
- 농업과 농촌이 정확한 이해를 위해 귀농교육 및 사전영농체험 지원
- 대안학교의 학력 인정 및 학교 운영비 지원
- 농어촌마을 사무장 등 지역개발전문가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및 자격증제도 신설

☐ 정책적 지원 측면

- 주택 구입·신축, 농장조성, 진입로 등 초기 투자비용 지원
-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으로 취업하는 도시민에게 초기정착비용 장기 무이자 지원
- 영농관련 지원을 제외하고는 이주민에게 기존 농민과 동일한 지원

☐ 기타

- 이주자들과 기존 농어촌 주민과의 융화 방안 강구

다. 지방자치단체의 도시민 유치 지원정책 사례

□ 상담 및 정보제공

-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귀농알선센터를 설치하고 공무원 1명을 전담안내원으로 지정, 상담부터 영농정착까지 지원(전남)
- 도시은퇴자 등 전입자에게 각종 행정업무 대행(경남 산청)

□ 사전 영농·적응 교육 및 체험 실시

- 도 농업기술원에서 귀농강좌를 개설하여 귀농 기초교육 실시(전남)
 - 귀농자 중 50명을 선정, 선도농가 현장실습시 지원(1인당 월 30만원)
- 귀농 예정자를 대상으로 전원생활이 필요한 기초영농교육, 텃밭 농장실습, 전원생활 정착사례 현지견학 등 실시(서울시 농업기술센터)

□ 빈집 알선 및 수선비 지원

- 농어촌 빈집정보센터를 설치하고 군 홈페이지에 빈집관련 정보 제공(충남 태안, 전북 고창, 전남 곡성, 경남 의령 등)
- 빈집에 정착시 주택수선비 보조(전남, 경남 등)
 - 전남(250만원), 영광(40만원), 하동(1,000만원 이내) 등
- 농어촌 주택개량융자사업 알선 등

□ 정착자금 지원

- 정착에 필요한 자금 2,000만원 용자 및 묘목 등 영농자재 지원
(경남 남해)
- 65세 이하 귀농어가에게 5,000만원 한도내 용자지원(전남)
- 타도시 거주 40세 미만의 사람이 귀농시 농가당 2,000만원 귀농
정착자금 지원(전남)

□ 기타

- 상당수의 지자체에서 출산장려, 영유아 양육 지원을 추진 중
 - 출산장려 : 현금보조(30~50만원 수준), 출산용품, 건강검진 등
- 기업체 임직원 및 대학생 전입시 해당기업 및 학생회 등에 인센
티브 제공(충남 예산)
 - 전입자 수에 따라 50만원(30명~50명)에서 5백만원 이상 지원
- 전입자 차량등록비지원 및 전입 대학생장학금 지원(충남 홍성 등)
- '03년부터 소규모학교 살리기 지원사업 추진으로 농어촌 초등
학생수 증가(경기)
- 귀농을 원하는 도시민을 유치하여 순환농업을 시범추진하기 위한
단지 조성(전북 장수)
- 군 홈페이지를 통해 주말농장 경작안내 및 영농자재 지원(전남 보성)

<전남 곡성군 사례>

□ 추진배경 및 경과

- 교육문제로 인한 농촌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를 방지하고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적정규모의 학교 현대화 및 교육내용 특화
-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 처음으로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합 시범지역」으로 지정('03.2)
- '04. 3월, '05. 3월 2차례에 걸쳐 학교 통폐합, '05. 3월 교육시설 현대화 완료

□ 적정 규모 학교 육성

- 곡성의 지리적 특성인 생활권을 중심으로 3개 권역으로 학교 재배치
- 초중고 26개 학교, 2분교, 15개 유치원을 14개 학교, 8개 유치원으로 재편성
- 국비 609.6억원으로 교육시설 현대화 추진
 - 기존 건물 리모델링 또한 신축, 교육문화센터, 수영장, 기숙사, 교원사택 등 추진

□ 좋은 학교 만들기 추진

- 권역별 원어민 강사를 통한 외국어 강좌 운영
- 관내 고등학교 입학예정자 대학교 언어교육원 위탁교육
- 유명학교 강사 초빙 심화교육 등 고3학년 특별반 운영
- 향후 영어교육특구 지정 및 폐교를 활용한 영어교육 타운 조성 계획

□ 곡성 관내 공장 임직원 지역정착 지원 계획

- 임직원 현황 : 2,132명(관내 608, 관외 1,524)
- 지원방안 : 사택부지 확보, 사원가족 문화활동 지원

◎ 성과 : ('03) 44명 타지역 진학 ⇒ ('05) 외지학생 64명 유입

라. 정책적 시사점

- ◇ 열악한 농어촌 교육·의료·복지여건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필요(농어업·농어촌 종합대책 및 삶의질향상 기본계획으로 추진)
- 본 내용은 도시민의 체재·정주 지원을 위한 정부차원의 종합 지원시스템 구축과 도시민에게 적합한 정주공간 마련에 중점

□ 도시민의 농어촌 체재·이주에 대한 수요는 일정정도 존재

- 인터넷을 통한 관련 정보제공 필요

* 7대 도시민 중 33%가 인터넷을 활용하여 농촌관광관련 정보수집

-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다양한 주거형태 공급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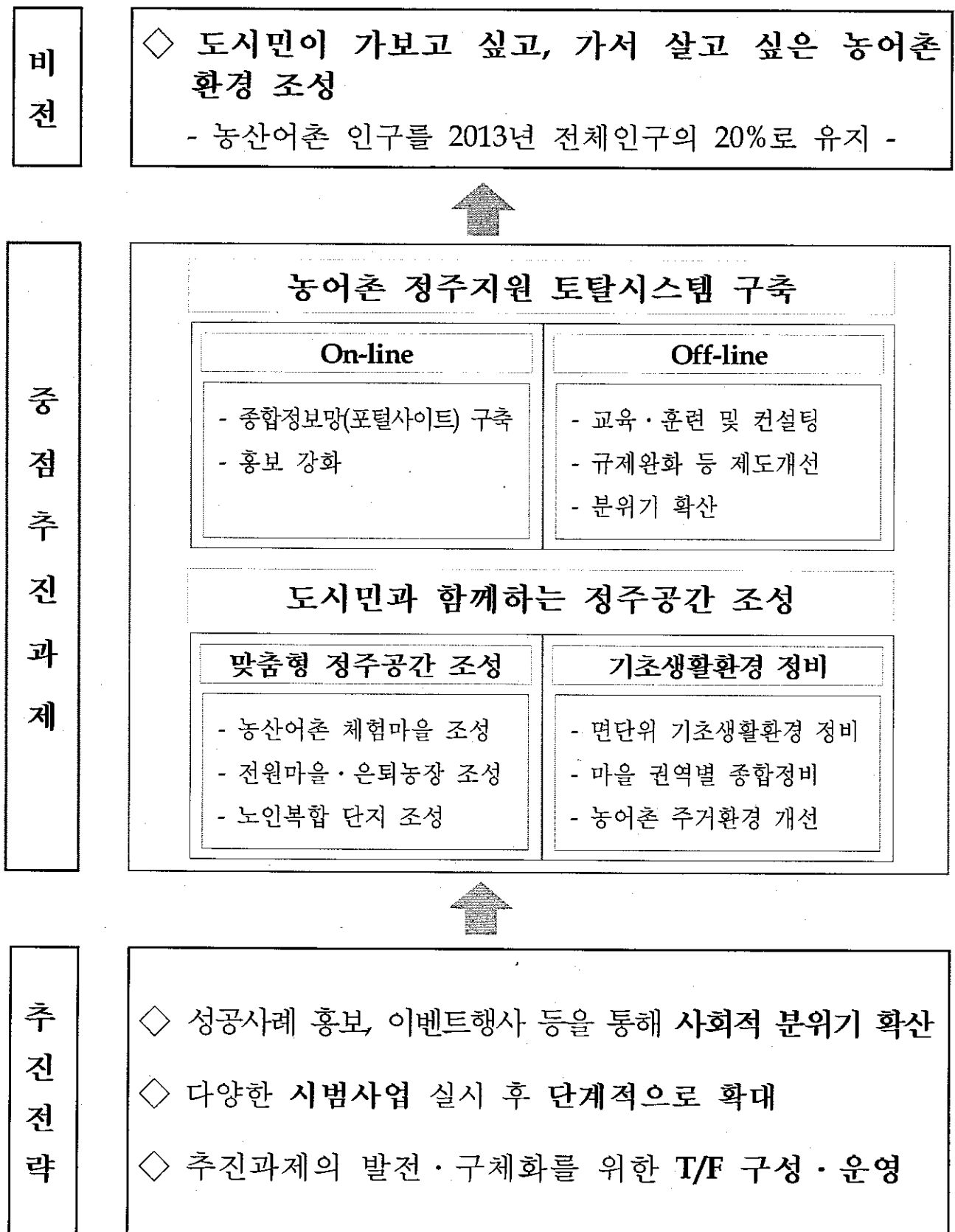
□ 점차 전원생활 희망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어촌을 도·농 상생의 공간으로 조성

- 인구증가 지역의 공통된 원인은 도시근교이거나 산업·주택단지 조성 등의 영향으로 분석되나, 본 보고의 범위에서는 제외

□ 중앙 정부차원의 체계적이고 정책적인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

- 일부 지자체 단위에서 도시민 유치지원사례가 있으나 산발적, 일회적 지원에 그치고 있음

3. 도시민의 농어촌 체재·정주 지원방안



가. 농어촌 정주희망 도시민에 대한 토탈서비스 제공

◇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조직 운영 및 인터넷 종합정보망 구축

(1) 토탈서비스 전담조직 운영

□ 도시민에게 종합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고,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Hub 기능 수행**

- 농어촌 관광 안내, 농어업·농어촌 이해 및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교육기관 안내
- 농지·농어촌주택 정보제공 및 수탁농지 임대·매도 등에 관한 상담·알선
- 정주 설계를 위한 컨설팅 및 농지전용, 정책자금 등 행정업무 알선·대행
-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와 관련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인터넷 종합정보망(포털사이트) 운영

□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선 도농교류센터, 농지은행 등의 기능을 하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토탈서비스 담당**

- 「농어촌정보상담실」을 설치하여 우선 농어촌체험관광, 농지은행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대표전화 : 1577-1417)
 - 금년말까지 주택정보, 귀농정보 등을 포함한 종합서비스체계 구축

□ 중장기적으로는 협치(Governance)에 기초한 **도농교류·정주 지원기구(가칭) 설립 검토**

- 농어업특위내에 T/F팀을 설치하여 구체적인 방안 검토

(2) 운영 방안

□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 정립

- 각종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대면·유선·인터넷)
 - 농어촌 체재자 : 농어촌 체험마을 안내, 1사1촌 자매결연을 위한 마을 안내
 - 귀농 도시민 : 농지·주택 매입절차 소개 및 알선, 경영컨설팅 알선
 - 농어촌거주희망도시민 : 농어촌주택 알선, 주말체험용 농지알선 등
 - 이·탈농 : 시세정보, 매물등록, 농지임대·매도 수탁관리

□ One-stop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종합적 지원

- 문의·신청 단계부터 전담인력이 각종 행정절차 및 업무대행
- 수요자가 각종 정보를 한 사이트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종합정보 네트워크(Hub-portal) 구축
 - 농지·주택 매물정보 사이트, 도시민 투자정보(빈집, 폐교 등), 농어촌관광·체험정보, 귀농교육 프로그램을 통합하는 포털사이트 운영
 - 정보제공 : 농어촌 체험관광('03년부터), 농지('05. 7. 14부터), 주택·귀농 등 전체 정보('06. 1월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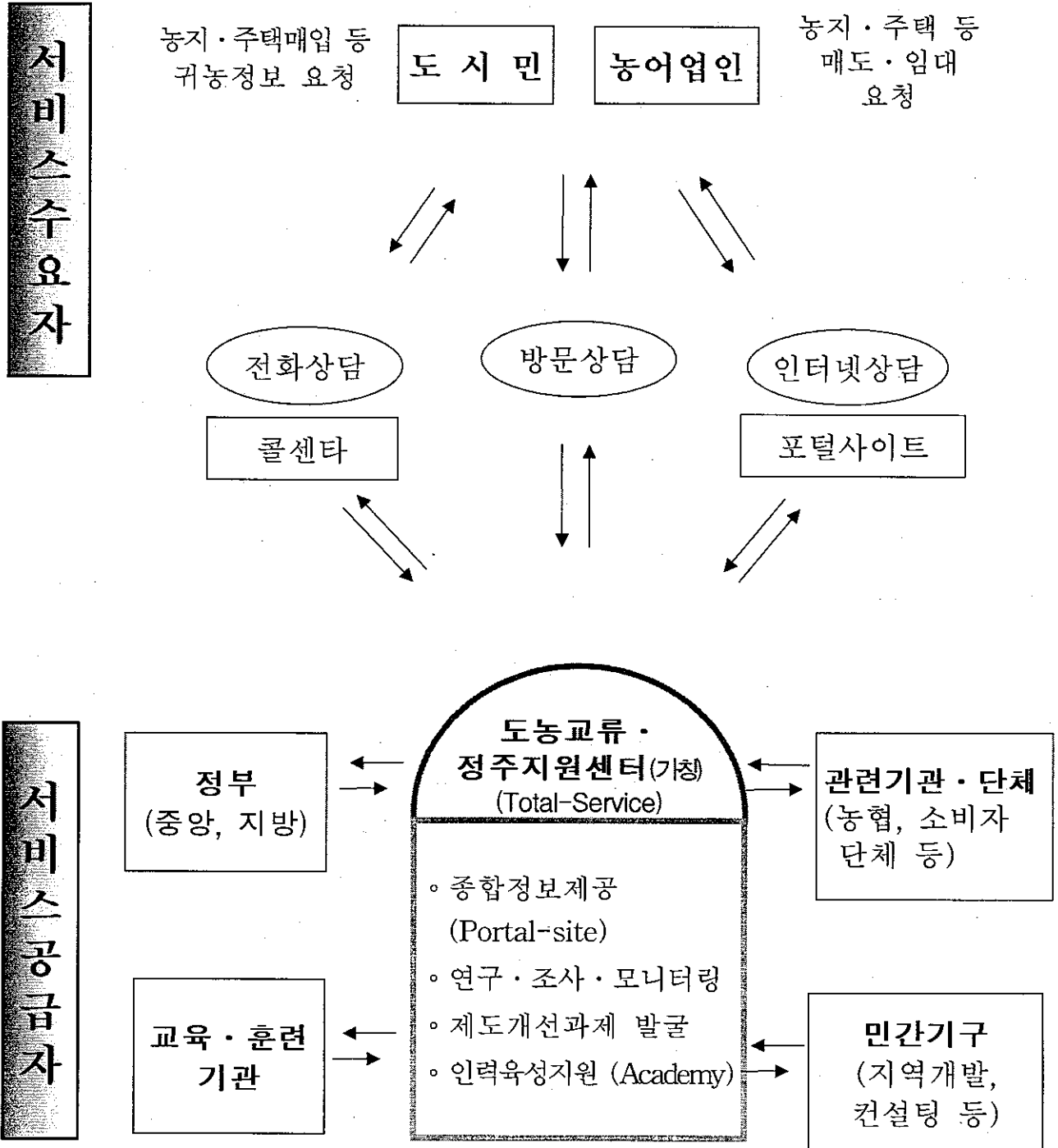
※ 농어촌종합정보망 사이트 주소 : www.nongchon.or.kr

- 시·군, 농협 등 관련 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DB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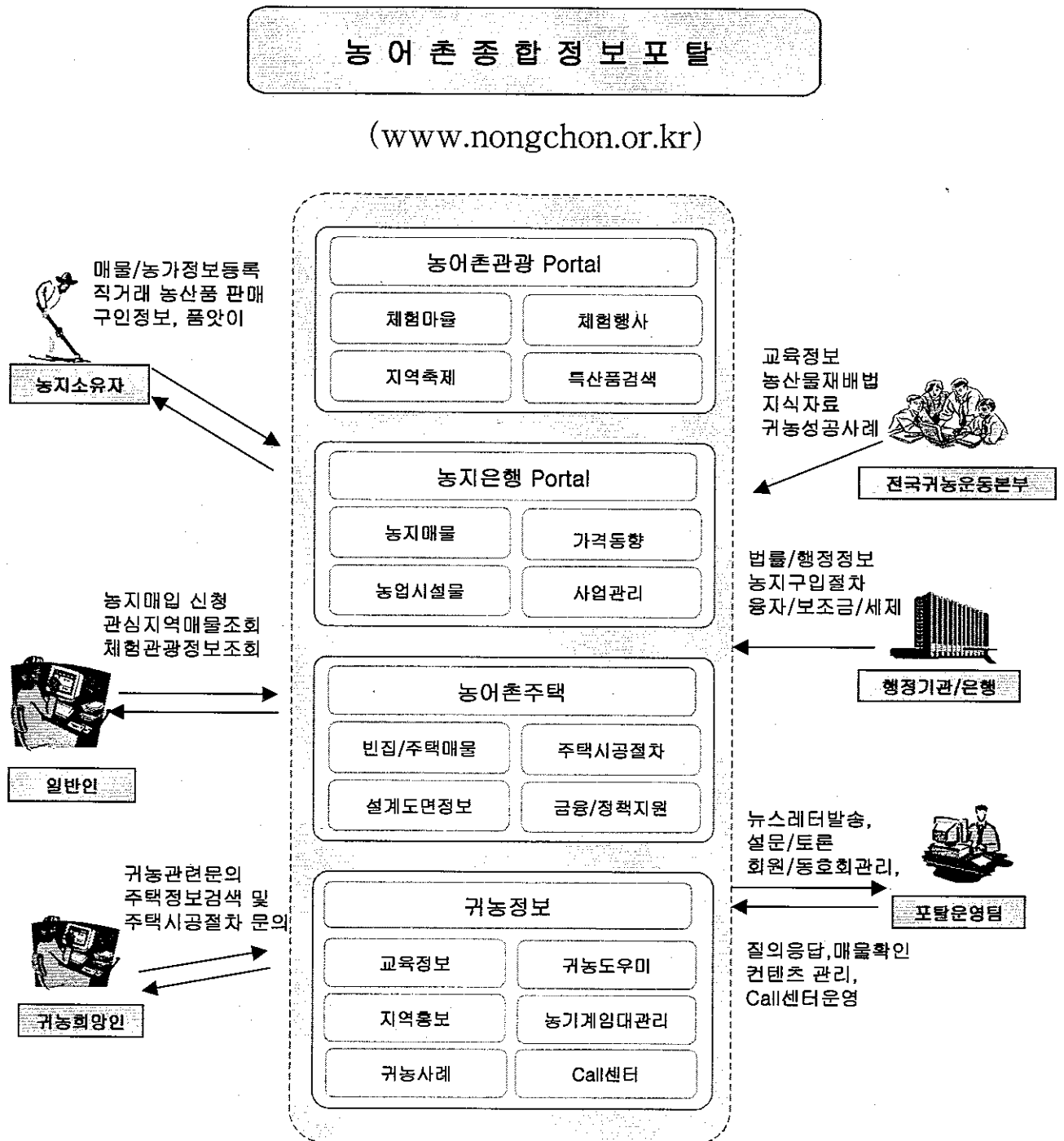
□ 일과성이 아닌 지속적 지원

- 포털사이트 방문·신청자를 PCRM 고객으로 관리
 - 정부지원프로그램, 제도변경사항 등 정보 수시 제공
- 귀농자간 상호정보 교환을 위한 커뮤니티 형성 지원

종합정보지원시스템



< 참고 >



※ 정보제공 : 농어촌 체험관광('03년부터), 농지('05. 7. 14부터), 주택·귀농 등 전체 정보('06. 1월부터)

나. 도시민의 농어촌 체제 · 정주지원 강화

◇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교육 · 훈련, 제도개선, 분위기 조성
창출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

(1) 농어촌관광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촌주민 역량 강화

□ 마을리더, 주민,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실시

○ 인력유형별로 요구되는 자질을 중점 교육하여 농어촌마을을 이끌
리더육성 및 농어촌주민의 참여 · 협동능력 강화('05:1,300명)

* 리더급 : 전문지식, 경영관리능력, 합리적사고 등 종합적인 역량

* 주민 등 참여자 : 적극적인 참여의지, 세부사업 실행 능력 등

* 지방공무원 및 유관기관직원 : 제도분야지식, 대민서비스 개선 등

○ 기본적인 교육내용 · 방법은 정부가 정하고 실제 교육은 민간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민간교육시장의 활성화 유도

□ 농어촌주민역량강화정책의 기획 · 집행을 체계적으로 지원
하는 '지역개발인력육성 아카데미'(가칭) 운영 검토

○ 농어촌마을리더, 주민, 공무원 등 지역 구성원의 역량과 역할을
체계적으로 연구 · 분석하고 제시

○ 역량배양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업무 등 총괄

※ 도농교류 · 정주지원 시스템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방안 검토

□ 농어촌관광을 전문적으로 서비스하는 전문가이드 육성

- 체험관광 안내,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마을해설사, 체험활동 지도사제도 도입
- 산림문화 및 휴양시설에 대한 체계적 지식전달 및 안내서비스를 위한 숲해설가, 등산안내인 제도 도입
- 농어촌관광 전문가이드 양성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민간 교육프로그램 인증 실시

□ 마을사무장 고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채용비용 지원

- 농어촌체험관광과 관련한 프로그램이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한시적으로 마을사무장 채용비용 지원
- 채용된 사무장이 농어촌관광 및 농촌지역개발과 관련한 기초적인 교육 수료 또는 관련분야의 경험이 있는 경우에 지원

□ 전문가 컨설팅 지원 및 출향인사와 농어촌간 네트워크 활성화

- 전문가 DB를 구축하여 마을컨설팅 지원(1인1촌 지원시스템)
 - 정부지원 사업비에 전문가 컨설팅 비용 포함
- 농어촌체험관광을 여행상품으로 다루고 있는 여행사·관련업체의 DB를 구축하여 농어촌 체험마을과의 연계 강화

□ 인력육성과 정부지원사업 연계 시행하여 사업의 효과성 제고

-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마을종합개발 등 대상지역 선정시 일정 수준이상 교육수료자 마을을 우선 지원

<민간전문가 컨설팅사례>

□ 이천 부래미 마을 - 〇〇〇

- 부래미마을에는 '02년부터 마을발전방향 등에 대해 자문
 - 부래미 공부모임을 운영(월1회)하면서, 마을주민의 농촌 체험관광에 대한 학습 및 능력개발 지원
 - '04년 일본 나가사기현 사이카이 마을과 국제교류를 지원
 - 사이카이마을 지도자가 방한, 일본사례소개 및 부래미 주민 대상강의
 - 사이카이 마을에서 부래미 마을지도자 등을 일본에 초청하여 사이카이 마을의 농촌체험관광 추진실태 소개 및 김치축제 등 개최
- 방문객 및 관광매출액 : ('03) 3.1천명/20백만원 → ('04) 11/206

□ 화천 토고미 마을 - 〇〇〇

- 토고미 마을에는 '99년부터 수시로 방문하여 마을개발방향 등에 대한 자문 및 주민대상 강의
 - 마을지도자 및 화천시 담당공무원과는 월1회 이상 전화통화를 통해 마을운영상황 점검·자문 실시
 - '05년 토고미 논두렁 재즈축제 기획(8월말 개최 예정)
- 방문객 및 관광매출액 : ('02) 4.5천명/302백만원 → ('04) 7/593

(2) 농어촌 정주희망 도시민에 대한 교육 및 자금지원

☐ 농어촌 정착을 위한 사전교육 강화

- 농어촌 주민과 쉽게 융화할 수 있도록 농어촌 생활문화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영농종사 목적으로 농어촌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에 대한 직업훈련 강화
 - 한국농업전문학교 등에서 영농이론, 실습, 영농설계 교육 실시
- 농업인턴제(18~32세), 대학생 창업연수(농과계 대학생) 등을 통해 현장체험 실시

☐ 기존 농어촌 이주자를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농어촌 정주 사례발굴, 홍보

- 농어촌 이주 성공 및 실패 사례를 분석하여 홍보를 실시

☐ 토탈서비스와 연계하여 농어촌에 이주한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어촌 생활에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 컨설팅

- 창업농의 영농초기 문제해결 지원을 위한 후견인제 운영
- 민간 컨설팅에 대한 비용 일부 지원

☐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자금지원

- 35세 미만의 자를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하여 창업농 지원사업으로 영농정착 자금 지원

* 지원조건 : 2천~12천만원, 5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4%

- 45세 미만의 경쟁력있는 농업인을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하여 농업종합자금으로 영농규모 확대 자금 지원

* 지원조건 : 2천~5천만원, 1~5년거치 2~10년 상환, 연리 3%

(3) 도시민의 농어촌 유입을 위한 제도 개선

- ☐ 도시민들의 개인용 주말농장 가꾸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주말농장에 소규모 주택 신축시 농지조성비 감면
 - 농업진흥지역밖 농지에 33㎡이하의 소규모 주택 신축시 농지조성비 감면
- ☐ 농어촌마을에서 폐교를 농어촌관광을 위한 숙박시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권 부여 및 임대료 감면
 - 농어촌마을에서 폐교를 임대하여 그린투어리즘에 활용할 경우에는 임대료를 인하·면제하도록 특례 마련
 - 마을에서 그린투어를 목적으로 폐교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의 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 대상으로 명시
- ☐ 농어촌마을이 국유림에 농어촌 관광객을 위한 산책로, 쉼터 등 농어촌관광용 시설을 설치할 경우 허용
 - 현재 국가가 사업시행주체인 경우에만 가능하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주체를 마을까지 확대
 - 공동산림사업 제도, 국민 참여의 숲 제도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국유림 활용범위 확대
- ☐ 도농교류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농어촌 민박시 음식제공 및 소규모 특산물 제조·판매, 마을단위 농어촌체험·휴양사업 등 근거 규정 마련
 - 농어촌관광자격증제도, 경관보전조례 등 근거 마련
 - 도농교류와 관련한 정보제공, 조사·연구, 정책건의 등을 총괄하는 도농교류·정주지원 시스템 근거 마련

(4) 도시민의 농어촌 체재·정주 분위기 조성

□ 「여름휴가, 농산어촌 고향에서 보내기」 캠페인 추진

- 국회, 중앙행정기관, 1사1촌 참여기업·단체, 농촌사랑 범국민운동본부, 학교 등에 캠페인 참여 협조 서신발송(8,000여명)

* 농산어촌체험마을 및 정보제공인터넷사이트 소개 책자 등분

- 농림어업관련기관, 언론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여름휴가, 농산어촌 고향에서 보내기」 캠페인 발대식 개최(7.11)
- 농·수협 등 기관별 홍보캠페인 전개 및 언론 홍보 추진(7월중)
- 농산어촌관광 안내사이트 및 인터넷 정보검색 사이트 등을 통해 도시민에게 농산어촌관광 정보 제공
 - 여름휴가 기간 동안 도농교류센터, 농협·수협중앙회 등 유관기관에 콜센터를 운영하여 안내 및 불편사항 접수·해소
 - 농림부·해수부·농진청·산림청·농협·농기공·수협 등 7개 기관 단체 공동 지원단 운영
- 농림어업 유관기관 직원이 농산어촌에서 휴가보내기 솔선 수범
 - 「1+1 농산어촌 휴가보내기 운동」을 추진하여 직원과 친지, 친구, 이웃 등이 함께 농산어촌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유도
- 체험마을에서 자체적인 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약안내, 마을별 체험프로그램 준비상황 등에 대한 점검·보완
 - 도시민의 체험중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농산어촌체험 마을에 관련 보험상품 홍보 및 가입 유도

□ 도시민 「1가구1농장가꾸기 범국민운동」 전개

- 시민단체, 농민단체, 지자체 등이 주체가 되어 러시아 다차, 독일 클라인가르텐 등을 벤치마킹하여 추진
- 1사1촌운동 마을에 체험농장 갖기, 체재형 주말농장 안내 등 추진

< 외 국 사 례 >

◆ 러시아 다차(Dacha)

- 별장이란 뜻의 러시아어로 도시근교의 통나무로 지은 오두막집과 텃밭이 딸린 주말농장

* 러시아 연방정부에 등록된 다차수는 약 32백만개소(인구 3.7명당 1개)

◆ 독일 클라인가르텐

- 주로 주택에 정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도시민들이 집에서 도보로 10~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시유지를 임대해서 채소 등을 심고 가꾸는 도시 구역안에서 집단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정원

* 클라인가르텐 수는 약 400만개소(인구 20명당 1개소)

◆ 일본 체재형 시민농원

- 도시민이 도시근교 소구역의 농지를 빌려 비영리목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하여, 휴식시설(오두막집) 등의 시설이 갖춰진 농원
- 50년대부터 그린투어리즘이 시작되어 '90년 '시민농원촉진법', '농업농촌생활과농업구조개선대책법'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 '94년 '농산어촌체재형여가활동촉진법'이 제정되면서 본격화

□ 농산어촌 일자리 창출 지원

- 농림어업분야 인력채용 및 창업, 농어업의 가치홍보, 성공사례 발표 등을 통하여 도시민의 농어촌 유입·정착 분위기 확산 (예 : 일자리 박람회 개최 등)
- 농어업 관련 기관·단체, 사람입국위원회 등과 협조·역할 분담

다. 도시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정주공간 조성

(1) 농어촌 기초생활 환경 정비

- ◇ 도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는 농어촌의 기초생활환경 조성
 - 인구유지가 가능한 농어촌마을의 20% 수준(1만개)을 집중 개발

[1] National minimum차원의 면단위 생활환경 정비

- ☐ 면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농어촌 정주기반 확충 사업을 지속적 추진
 - 마을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
 - 마을회관, 소공원, 녹색담 조성 등 경관정비 병행 추진
- ☐ 주민의 소득 및 생활수준이 낮고 교통이 불편한 오지지역을 대상으로 오지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간 격차 해소

[2] 잠재자원개발을 고려한 마을권역별 종합적인 환경정비

- ☐ 경관형성, 지역자원개발, 커뮤니티형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 특성을 반영한 농촌마을종합개발 추진
 - 동일한 생활권·어메니티자원 권역 등 동질성이 있고, 발전잠재력이 있는 마을들을 상호 연계하여 소권역단위로 종합개발
 - 지역주민과 지역내 관련전문가 등이 주도하는 상향식 개발방식으로 추진
- ☐ 산촌유형별 개발모델을 정립하여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산림경영의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한 산촌종합개발 추진
- ☐ 생산·관광·문화가 공존하는 어촌건설을 위해 중심항 등을 축으로 하는 중심어촌계를 대상으로 어촌종합개발 추진

③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 농어촌주택 신축 및 노후주택의 리모델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농촌주택 신축·개량 지원 확대 검토

○ 주택면적 상한 확대(현행 30평 이하)

○ 융자지원금액 상한 확대 및 지원금리 인하

* 융자상한액 : 2~3천만원 → 5천만원(주택신축소요액의 1/2수준)

* 지원조건 : 현행 3.9%~5.5% → 2~3% 수준(5년거치 15년 상환)

* 농촌주택 신·개축 자금('05) : 1,956억원

○ 용자자격을 도시에 사는 자녀까지 확대하여 아들·딸이 적극적으로
농촌노후주택 신·개축에 참여 유도

- 농촌거주 부모의 주거생활 편의 개선 및 향후 별장용으로 활용

○ 연간 5천동씩 빈집정비 추진 : ('04) 52천동 → ('09) 77천동

□ 국민주택기금을 농촌주택개량 및 신축에 활용 확대 검토

○ 농촌주택 개량자금에 저리(3%)의 국민주택기금 지원비중을 확대
(30%, 540억원 → 40%, 720억원)

<'05 농어촌주택 개량자금 구성>

재 원	계	기 금	재 특	농 특	지방비	농 협
구성(%)	100	30	20	10	30	10
금리(%)	3.9	3.0	3.5-4.5	3.0	0	7.0

○ 다가구 농촌주택 신축에 국민주택기금 활용방안 마련·시행

* 8가구 기준 호당 최고 120백만원(연리 5%, 1년 일시상환)

□ 농가의 전통성과 편리함을 조화시킨 주택모델 개발·보급

○ 농가환경 전문가 진단을 거쳐 다양한 주택모델(환경친화형, 고령자
편의형 등)을 개발, 주택 신·개축시 적용

(2) 도시민 체재·정주 유형별 맞춤형 정주공간 조성

- ◇ 2013년 농어촌관광객중 약 30%(4천만명)의 수용능력을 갖춘
 - ◇ 노인복합단지, 전원마을 등을 도시은퇴자의 유입거점으로 활용
- * '13년까지 6만명 이상 수용(전원마을 200개소, 장수마을 1,200, 노인복지단지 80)

□ 농어촌체험마을, 휴양림 조성을 지속적으로 확대

- 농산어촌체험, 친환경농업, 전통문화 등 다양한 테마를 활용하여 다양한 유형의 농어촌체험마을 육성('13년까지 1,112개)
- 산악자전거, 승마 및 산림문화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자연 휴양림 확충('13년까지 184개소)

□ 농어촌 체재·정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규모화 된 이주를 촉진하기 위한 단지형 전원주거모델개발 시범추진

- 단지개발은 원칙적으로 민간이 추진하고 정부는 진입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
 - 주말전원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도시민들이 소규모농장과 체재시설을 갖춘 주말농원조성 지원(전북 부안, 전남 함평 등 2개소)
 - 재촌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농촌거주를 유도하기 위한 전원주택단지 조성 지원(전남 담양 등 26개소)
 - 도시은퇴자를 대상으로 의료·문화·주거시설 및 소일거리가 결합된 복합적 기능을 하는 농어촌 노인복합단지 조성 지원(강원 영월 등 4개소)
 - 도시은퇴자를 대상으로 주거시설 및 농업관련 소일거리가 결합된 은퇴농장 조성 지원(전남 나주 2개소)

□ 시범사업추진성과 및 민간사례 등을 연구·분석하여 도시민의 농어촌정착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메뉴 확대 및 세분화

유형별 구분	주요 사업내용
<5都2村> ① 농어촌체험관광형 ② 주말전원생활형	□ 농어촌체험 마을 ○ 체험농장, 소규모 체육시설, 도시민 쉼터, 산책로, 전통 가옥 개보수, 컨설팅 비용 등 지원 * '05년까지 246개 농어촌관광마을 조성 지원 ○ 우수사례 : 강원도 화천군 신대리 토고미 마을 □ 체재형 주말농원 ○ 주말전원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소규모 농장과 체재시설(각10평)을 갖춘 20호 규모의 전원단지 조성 - 단지 진입로,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 * 금년부터 시범사업 추진(부안, 함평 등 2개소) ○ 민간사례 :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리 그리운고향주말농원
<5村2都> ③ 재촌전원생활형 ④ 노후생활형	□ 맞춤형 전원주거단지 ○ 직장인, 친지·동호인 모임 등 다양한 민간인 그룹을 대상으로 20~50호 규모의 전원주택단지 조성 - 단지 진입로,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 * 금년부터 시범사업 추진(담양 등 26개소) ○ 민간사례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재산리 금당전원마을 □ 농어촌 노인복합단지 ○ 도시은퇴자를 대상으로 의료·문화·주거시설 및 소일거리가 결합된 복합적인 기능을 하는 생활공간 조성 - 복합노인복지시설(복지부), 노인체육시설(문화부), 진입로, 상·하수도 등 SOC(농림부), 주거단지·생산단지(민자) 등 * 금년부터 시범사업 추진(영월, 서천, 진안, 곡성 등 4개소) ○ 민간사례 : 전북 김제시 노인종합복지타운

라. 농어촌 공간조성사업 추진체계 정비

(1) 사업추진 현황 및 문제점

- ☐ 6개 부처에서 크게 일반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과 낙후농어촌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음

<주요 농어촌 공간조성사업 현황>

대분류	소분류	세부사업
일반농어촌 개발	소도읍 육성	거점(중심지)개발
	정주기반확충	기초생활환경정비
	권역별 종합개발	농촌마을종합·어촌종합· 산촌종합개발
	농산어촌체험마을조성	녹색농촌체험·어촌체험· 전통테마마을
	전원마을조성	농촌이주·정착 유도
낙후농어촌 특별지원	오지·도서개발, 접경지역·개축지구 지원	낙후지역 도로 등 기초생활 환경개선 지원
	신활력지원	RIS구축 등

- ☐ 농어촌개발과 관련된 부처별 기능 및 행정공간범위에 따라 정책사업을 개발·추진함에 따라 시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
- 농촌·산촌·어촌종합개발사업은 농·산·어촌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대상지역이 공간적으로 중복
 - 면단위 기초생활환경정비 목적의 정주권 개발과 낙후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성격의 오지·도서 개발사업은 실질적으로는 사업내용이 유사하고 전국의 면을 2가지(정주권면, 오지면)로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
 - 정주권면(농림부, 면당 30억원), 오지면(행자부, 면당 25억원)

- 농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을단위 농어촌 체험마을조성사업은 부처별로 특성화 시켜 사업을 추진중이나 실제사업내용은 유사한 측면이 있음
 - 실제 조성되는 체험시설·체험프로그램은 거의 동일함
 - 신활력지원사업은 농림부·해수부 등의 소득기반지원 사업과 각종 S/W지원사업과 내용 중복
- 부처별 사업들이 각각 개별법령에 근거를 두고 추진되고 있어, 사업들간 조정 등 종합적인 정책추진 곤란
- 개별법령에 지자체(도, 시·군)단위의 농어촌공간조성사업과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 되어 있고, 각 사업간 연계 추진 미흡

(2) 개선방안

- ◇ 중앙부처간 미션과 기능을 고려하여 유사사업간 협력 또는 상호보완 강화
 - 중앙정부 부처의 특성, 노하우를 고려하여 추진하되 상호협력을 통해 사업지역 중복 등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
- ◇ 지자체(시·군)단위의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 지방화·분권화 추세에 따라 지역이 사업추진주체가 될 수 있는 여건 마련
 - 여러 부처의 다양한 농어촌 공간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단위에서 관련사업계획의 종합조정 필요

① 부처간 유사한 성격의 사업은 묶어서 통합지침 마련 및 협의체를 운영하여 조정·보완하고 기타사항은 현행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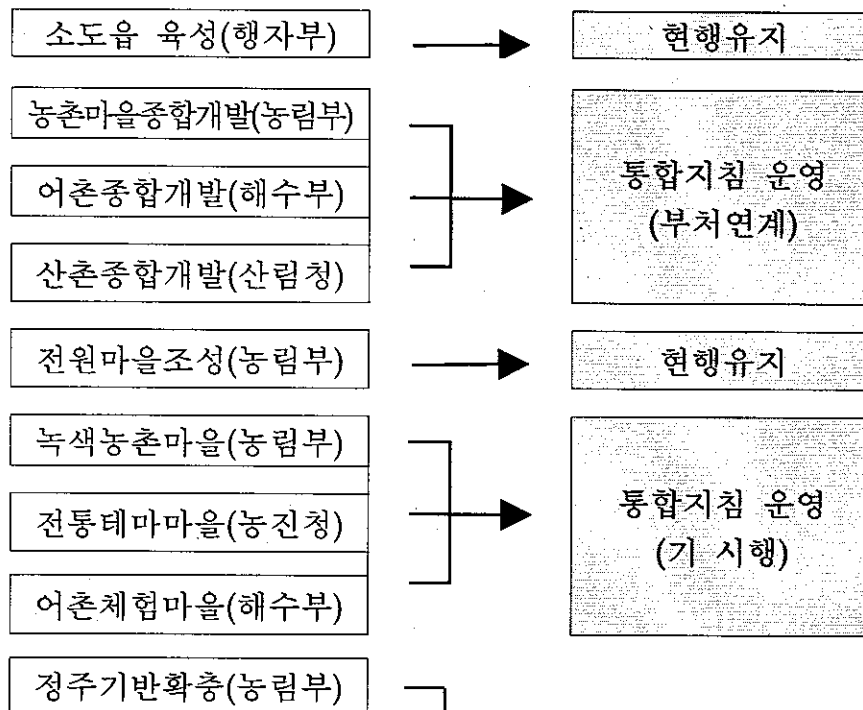
- 일반농어촌과 낙후농어촌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는 기초생활환경개선 사업들은 사업통합지침을 마련하여 연계 강화
 - National minimum충족차원에서 농어촌 면지역 전체에 대한 기초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
- * 대상사업 : 정주기반확충, 오지·도서개발사업
- 농촌·산촌·어촌 종합개발은 농산어촌 소권역별 종합개발사업으로 묶어 협의체 운영 및 통합지침 마련
- 농산어촌 체험관광마을 조성지원사업은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관계부처 통합지침을 지속 보완·발전
- * 대상사업 : 녹색농촌체험마을, 전통테마마을, 어촌체험마을조성
- 소도읍육성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신활력지원사업, 접경지역지원 및 개척지구지원사업은 지원대상 및 사업목적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

② 농어촌 공간조성사업의 시행주체인 시·군단위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조직체계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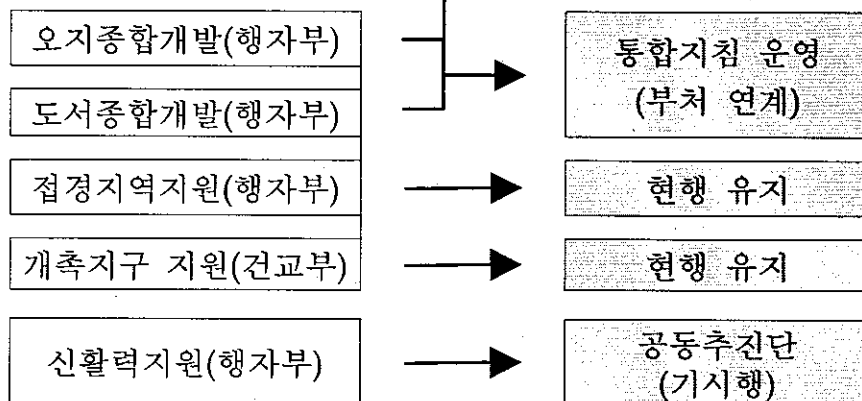
- 시·군 단위의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농어촌공간조성을 추진할 수 있는 종합계획(Master Plan) 수립
 - 시·군단위의 발전적인 공간정비의 미래상에 따라 기초생활환경, 종합개발, 체험마을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 추진
- 시·군 단위에 분산되어 있는 농어촌 공간조성과 관련한 조직을 과단위로 재조직하여 관련사업간 연계추진 될 수 있는 여건 마련

농어촌 공간조성사업 조정방안

◆ 농어촌 전체



◆ 낙후 농어촌



4. 향후 추진계획

◇ 농특위가 총괄·점검·평가하되, 당장 추진이 가능한 부처별 추진과제는 각 부처 책임하에 추진

가. 추진방향

□ 농어업특위 내 T/F팀 구성·운영('05. 7~12월)

- 현장방문, 수요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대책 발전·구체화
 - 과제별 담당부처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 도농교류·정주지원센터(가칭) 설립, 인력양성 아카데미 기능 등 검토
- 핵심 전문가로 T/F팀을 구성하고, 외국사례 등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
 - 정책수요자, 전문가, 관계부처 등 15명 내외로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금년말까지 주요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복지기반 확충 과제도 포함하는 실질적인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구체화방안 마련

□ 도시민의 농어촌 체재·정주 관련 지역 순회 토론회 개최

- 도시민의 농어촌 체재·정주 분위기를 확산하고, 현장의견 수렴을 통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 폐교·저수지·다랭이논·빈집·야생화 군락지 등 지역 부존 자원의 활용사례 발표
 - 지자체의 도시민 유치 지원정책 우수사례 발표, 홍보
 -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지원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 등
- 우수사례 지역 중심으로 주제를 선정, 지역 순회토론 실시
 - 9개도에 설치된 지역 농어업특위와 공동으로 추진

나. 부처별 세부추진과제

(1) 농어촌 정주희망 도시민에 대한 토탈서비스 제공

중점과제	세부추진과제	담당부처
1-1. 토탈서비스 전담조직 운영	1-1-1. 토탈서비스 제공	농림부
	1-1-2. 도농교류·정주지원기구 설립 검토	농림부
1-2. 인터넷종합정보망(포털사이트) 운영	1-2-1. 포털사이트 구축·운영	농림부

(2) 도시민의 농어촌 체재·정주지원 강화

중점과제	세부추진과제	담당부처
2-1. 농어촌 주민역량 강화	2-1-1. 맞춤형 교육 실시	농림부
	2-1-2. 전문가이드 육성	농림부
	2-1-3. 마을사무장 채용비용 지원	농림부
	2-1-4. 전문가 컨설팅 지원 및 네트워크 활성화	농림부
	2-1-5. 지역개발분야 신직업군 창출	농림부
	2-1-6. 인력육성과 정부지원사업 연계 강화	농림부
2-2. 농어촌 정주희망 도시민에 대한 정착 지원	2-2-1. 사전교육 강화	농림부
	2-2-2. 농어촌 정주사례 발굴·홍보	농림부
	2-2-3. 사후컨설팅 지원	농림부
	2-2-4. 영농정착자금 지원	농림부
2-3. 도시민의 농어촌 유입을 위한 제도 개선	2-3-1. 주말농장용 소규모 경관주택 신축 규제완화	농림부
	2-3-2. 폐교 농어촌마을 우선활용 및 임대료 감면	교육인적자원부
	2-3-3. 농어촌마을 국유림 활용 확대	산림청
	2-3-4.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농림부
2-4. 도시민의 농어촌 체재·정주 분위기 조성	2-4-1. '휴가, 농어촌에서 보내기' 캠페인 전개	농림부
	2-4-2. 도시민 '1가귀농장가꾸기' 밤국민운동	농림부
	2-4-3. 농산어촌 일자리 창출 지원	농림부

(3) 도시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정주공간 조성

중점과제	세부추진과제	담당부처
3-1. 유형별 맞춤형 정주공간 조성	3-1-1. 농어촌체험마을 지속 추진 3-1-2. 자연휴양림 확충 3-1-3. 맞춤형 전원주거단지 조성 시범 추진 3-1-4. 농어촌 노인복합단지 조성 시범 추진	농림부, 해수부, 농진청, 산림청 산림청 농림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3-2. 농어촌기초생활환경 정비	3-2-1. 농어촌정주환경 확충 및 오지개발 3-2-2. 마을권역별 종합적인 환경 정비	농림부, 행자부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
3-3.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3-3-1. 농어촌주택 신축·개량지원 확대 3-3-2. 국민주택기금의 농어촌주택 신축·개량 활용 확대 3-3-3. 주택모델 개발·보급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농촌진흥청

(4) 농어촌 정주공간사업 추진체계 정비

중점과제	세부추진과제	담당부처
4-1. 중앙단위 관계부처간 협의체 운영	4-1-1. 협의체 운영 4-1-2. 유사사업 통합지침 마련	농림부 농림부
4-2. 시·군 단위 종합추진	4-2-1. 시·군 조직체계 개편 4-2-2. 시·군 단위 종합계획 수립	행정자치부 농림부

(5) 후속조치 추진

중점과제	세부추진과제	담당위원회
5-1. T/F팀 구성·운영	5-1-1. T/F팀 구성·운영	농어업특위
5-2. 지역순회 토론회 개최	5-2-1. 지역순회 토론회 개최	농어업특위

다. 추진일정(로드맵)

구 분	1단계 (2005)	2단계 (2006~2007)
총괄	○T/F팀 구성·운영 -도시민 농어촌체재·정주지원 방안 구체화	
토탈서비스	○농업기반공사 토탈서비스 전담 부서 설치 ○포털사이트 개설·운영 -농어촌관광·농지(시행중) -주택·귀농 정보 제공	○도농교류·정주지원 기구 설립 검토 -인력양성 아카데미 등
체재·정주지원	○농어촌 관광 시설용 국유림 사용 허가	○도농교류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폐교의 농어촌 관광시설 활용 지원 ○소규모 주택 농지조성비 감면
맞춤형 정주공간 조성	○단지형 전원주거 모델 조성 사업 시범 실시	○평가후 단계적 확대
기초생활환경 정비	○주택 모델 개발·보급	○농촌주택 신축·개량 지원 개선
사업추진체계 정비	○사업유형별 협의체 구성	○사업유형별 공동지침 마련 ○시·군 단위 조직정비 및 종합 계획 수립

<참고1>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관련 주요지표

구 분	지 표	2005	2009	2013
농어촌생활 공간정비	농촌마을종합개발	36개 권역 (309마을)	276 (2,500)	1,000 (9,000)
	어촌종합개발	139개 권역 (923마을)	190 (1,012)	225 (1,155)
	산촌종합개발	118개 권역 (436마을)	195 (737)	267 (992)
농어촌 정주시설	전원마을	2개소 (180명)	125 (11,000)	200 (18,000)
	복합노인복지단지	4개소 (230명)	40 (10,000)	80 (20,000)
	장수마을	100개소 (600명)	1,200 (16,000)	1,200 (24,000)
농어촌 관광	녹색농촌체험마을	123개소 (2,245천명)	451 (8,230)	850 (15,512)
	어촌체험마을 어촌·어항관광단지	57개소 (2,081천명)	129 (10,058)	136 (10,313)
	전통테마마을	66개소 (1,445천명)	150 (3,285)	150 (3,285)
	휴양림	94개소 (6,360천명)	152 (10,512)	184 (12,733)

<참고2>

도시민의 농어촌 체재 · 정주 유형별 사례

유형별	마을명	가구/인구 (‘02→’04)	마을특성 및 유형별 사례
① 농 어 촌 체험관광형	교촌마을 (경북 의성)	<방문객수> (‘03) 1,700명 →(‘04) 3,400	○ 전담 사무장 고용, 100여개 체험프로그램 개발, - ’04년 3,400명 방문, 270백만원 매출 ○ 마을부녀회 중심, 농촌체험마을 사업 활발히 추진
	장호1리 (강원 삼척)	<방문객수> (‘03) 3,000명 →(‘04) 7,000	○ ’03년 생태 및 선상체험장 등 어촌체험마을사업 추진 - ’04년 7,000명 방문, 381백만원 매출
② 주말전원 생활형	운정리 · 운종리 (전북 임실)	92/213 → 108/227	○ 옥정호 주변의 수려한 경관, 인근 전주와 접근용이 ○ 마을 진입로 확포장 등으로 민간자본에 의한 전원 주택 신축 확대 - ’01년 7세대, ’04년 2세대 등 9세대
③ 취 업 형	■ 귀농 바리실마을 (충남 금산)	67/198 → 72/217	○ 경관이 좋은 산촌마을로서 대전과 인접, 사과 재배로 타 마을에 비해 소득이 높아 귀농 증가
	■ 귀어 미라리 (전남 완도)	104/301 → 108/300	○ 김양식에서 전복양식으로 대체개발 성공, 호당 평균 60백만원 수준으로 대도시에서 전복양식 목적 이주 증가
	■ 산업단지 입주 광혜원리 (충북 진천)	2,272/6,548 → 2,730/7,245	○ 산업단지, 농공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인구 증가 - 수도권 접근 용이(진천IC) 등으로 산업단지 이주 촉진
	■ 농촌관광 등 황태마을 (강원 인제)	153/404 → 185/491	○ 내설악국립공원, 동해안 등으로 펜션업 증가 ○ 황태생산 · 유통과 관련한 종사 인원 증가

유형별	마을명	가구/인구 (‘02→’04)	마을특성 및 유형별 사례
④ 노 후 생 활 형	홍원리 (충남 홍성)	은퇴농장 17 가구 18명 입주	○ 직거래 사업을 하던 개인이 ‘96년부터 은퇴농장 운영 - 1만평의 농지에 농장이 딸린 주택 24호 신축 임대 ○ 유기농채소 공동재배, 1인당 월50만원 수입
	독일마을 (경남 남해)	(‘02)5/10→ (‘05)8/16	○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로 나가 일하던 교포 정착 마을 - 지자체에서 부지, 도로, 상·하수도 등 SOC 지원
⑤ 도 시 출퇴근형	쌍태리 (전남 담양)	70/213 → 78/220	○ 대학교수가 전원생활을 위해 전문직 종사 친구들과 함께 이주, 광주 출퇴근
	평당마을 (경남 하동)	322/977 → 399/1,218	○ 경관이 좋고 교통 편리, 인근에 광양제철, 하동화력 발전소 등이 있어 출퇴근하는 인구가 계속 증가
⑥ 기 타 형	안솔기마을 (경남 산청)	14/42 → 30/92	○ ‘99년 대안학교인 「간디학교」 교육부 최초 인가 - 최초 학생 20여명 모집이후 현재 100명으로 증가, - 교사가족 14세대 44명 이주, ‘03년 생태마을 조성 도시민 15세대 53명 이주
	문충마을(중전) (경기 화성)	122/322→ 124/306	○ ‘01년 폐교활용, 문화시설인 「창문아트센터」 개소 - 예술가(10명)작업실, 계절별 예술제 개최 - 도시출신 예술가와 마을주민이 함께 농촌체험사업 실시